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Measurement of the Record Information Contents In Past History Commission

우 지 원(Jee-Won Woo)**

이 영 학(Young-Hak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4.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
| 2.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의 필요성 | 5. 결 론 |
| 3. 외국의 과거사 관련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사례 | |

<초 록>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된 위원회이다. 하지만 이 위원회들은 현재 모든 업무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방안을 생각하였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중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제어: 기록관리, 기록정보콘텐츠, 과거사 관련 위원회

<ABSTRACT>

With the movement for complete liquidation of the part history began during participatory government, a special law for the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was enacted and committees related to the past history have been established. Works related to the past history has relatively smoothly progressed even if there have been many obstacles, but as the duration for the special law reached its final point, committees related the past history came to the fork of a road. This study reflects on this reality and focuses on measures for application of the records collected by committees related to the past history and in this way, establish and selected the record information contents was established and selected. The users of the information was classified into professors, students, and history researchers and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Damages by Compulsory Mobilization under Japanese Imperialism,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Japan Collaborators, a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were selected for the committees related to the past history to establish the contents.

Keywords: record management, record information contents, history commission

* 이 연구는 우지원의 석사학위논문(2010)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방안 연구」 중 일부를 발췌·요약·수정한 것임.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기록연구소(woo1980800@korea.kr) (제1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교수(youhlee@hufs.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1년 5월 14일 ■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1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22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식민지하의 친일행위에 관련된 일을 규명하는 위원회로, 매국행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협력행위 그리고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죄의 역사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동체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부류이다. 다른 하나는 분단과 한국전쟁의 역사적 상황 및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관한 일을 규명하는 위원회로,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저질러진 불법행위의 피해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한을 풀고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나아가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부류이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¹⁾의 발족은 이처럼 큰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는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17개 위원회 중 12개의 위원회가 2004~2008년 사이에 설립되었고 존속기간이 명시된 위원회들의 활동기간이 대부분 4~5년인 점을 고려할 때 과거사 관련 위원회 대부분은 2008~2013년 사이에 폐지되게 된다. 이미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온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로 약칭)가 2009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로 약칭)가 2010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로 약칭)가 2010년 12월에 폐지되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위원회들의 폐지도 문제지만, 위원회 폐지 이후 기록물 이관·관리 방안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따라서 이 글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 폐지 이후 어떻게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을 통합 활용할 수 있을가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대안으로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구축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생산, 수집, 기증받은 기록물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이 기록물 중 활용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성격이 비슷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를 재분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 기록물의 연계를 통해 기록정보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금까지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에 대한 연구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종이기록물의 관리방안, 전자기록물 관리와 보존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의 통합방안, 위원회 폐지 이후 기록물 보존을 위한 통합기록관 설립방안 등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각 위원회의 기록물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1) 과거사 청산 관련 작업을 위한 기구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위원회 이외에도 민족문제연구소,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등과 같은 민간기구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위원회 중심으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생산, 수집된 각 위원회 기록물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격이 다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물의 통합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이 활용방안으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이라는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1.3 선행연구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물의 콘텐츠 구축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으나, 본 글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 과거사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현황과 기록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 두 번째, 특정 기록물을 통한 콘텐츠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민철(2005)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무렵 ‘친일기록’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김득중(2005)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통과된 시점에 연구하였는데, 이 법을 통해 민간인학

살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당시 민간인학살 기록물의 현황과 이러한 기록물의 수집,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임희연(2008)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미현(2007)은 강제동원진상규명위를 중심으로 구술기록의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김정희(2008)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중에서도 반민규명위의 조사기록²⁾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특정기록물을 통한 콘텐츠 구축방안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설문원·김익한(2006)의 연구는 1차 사료인 공공기록물을 대상으로, 연구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쉽게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성보(2007)는 기록물의 이용대상을 교수와 학생으로 제안하고,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세분화하여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제공과 구축방법론,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발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호(2008)는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기록정보콘텐츠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호주의 NAA와 영국의 TNA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기록정보콘텐츠의 문제점, 효율화 방안 등을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김인애(2008)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콘텐츠를 중등사회교육을 위해 서비스할

2)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생산·관리하는 기록물에 대한 일관된 정의 및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들 위원회 중 조사기록에 관한 규정이 있는 위원회는 진실·화해위로 조사기록을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기록물”로 정의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2007.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진정사건 기록관리지침”에서 “국방부, 경찰청, 검찰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번사사건기록은 원본수사기록으로, 국방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기록을 재조사기록”으로 정의하고 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사건기록관리지침』, 2006. 반민규명위는 조사기록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기록관리소개』라는 매뉴얼에서 조사업무와 민원업무 각 단계에서 생산·등록되어야 하는 기록물을 조사기록으로 보고 있다. 반민규명위, 『기록관리소개』, 2007. p.11 김정희, 위의 논문, pp.12-13 참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캐나다의 LAC, 영국의 TNA 사례를 소개하고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외국사례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콘텐츠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상으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성격을 알아보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의 현황 파악을 통해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 콘텐츠 구축의 필요성

2.1 과거사 관련 위원회 현황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대체로 명칭에서 해당 위원회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법 1조 '정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주로 명예회복, 진상규명,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진실·화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재산의 국고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결과 '권고사항'이 도출되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본적인 취지는 한국 근·현대사 과정에서 희생을 치른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과 함께 국가공권력으로 국민을 가해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기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가 설립되어 업무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이 특별법에서 정하는 폐지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사 관련 위원회 폐지 이후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한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업무는 대부분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60~70년 전의 과거사를 기록물 없이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들은 설립 초기 기록물의 수집과 발굴에 집중하였고, 어느 정도의 기록물이 모였을 때 연구·조사를 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보상업무 등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과거사 관련 위원회 폐지 이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위원회에서 생산하고 수집해온 기록물일 것이다. 이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를 숙고하고 실천해나가는가에 따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 후손들에게도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이 과거사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2.2 과거사 관련 위원회 소장기록물 현황

참여정부시기 설립된 정부위원회 중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대부분 정해진 기간 내에 임무를 완성해야 하는 한시조직이다. 또한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위원회들은 그 당시의 진실규명 혹은 보상금지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일반 부처와 달리 '조사기록'이 주를 이루며, 그 바탕이 되는 '수집기록'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기록물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전체 17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중 활발히 활동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진상규명위'로 약칭), '반민규명위', '진실·화해위' 등 3개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소장한 기록물의 종류와 현황, 소장기록물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 위원회의 소장기록물 현황을 살펴보면, '강제동원진상규명위'의 기록물은 크게 「위원회 인정기록」,³⁾ 구술기록, 사진기록, 박물기록, 유물기록, 피해조사기록으로 나뉜다. '강제동원진상규명위'의 기록물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 인정기록」의 경우 전체 544권으로 마이크로필름(M/F) 26롤(약 48만 명분)⁴⁾을 일본으로부터 이관 받아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강제동원진상규명위에서 업무를 위해 DB 작업을 하여 이용하고 있다. 구술기록은 총 2,525건, 사진기록 1,073건, 박물기록 113건, 유물명부기록은 35곳에 12,000여명의 기록이 있으며, 피해조사서철의 피해자결정이 111,259건, 지원금 지급결정이 31,052건이다.

'반민규명위'의 기록물은 크게 일반문서류, 간행물류, M/F, 사진, 조사기록으로 나뉜다. 반민규명위의 기록물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문서류는 대부분 해외나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기록물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고, 그 수집량은 3,759권이다. 간행물류는 책자, 당시 신문들로 9,533권, M/F 826롤, 시청각류가 CD, DVD 등을 합쳐 142점, 이미지화된 사진이 1,357장 있다. 반민규명위의 가장 핵심 기록물인 조사기록

은 정치, 통치, 경제 등 분야별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으며, 총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를 완료하였다.

'진실·화해위'의 기록물은 크게 문서류, 도서류, 시청각류, 지도류, 조사기록으로 나뉜다. 진실·화해위 기록물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문서류는 2,046권, 도서류는 단행본, 논문, 정기간행물, 위원회 간행물로 나누어지며 총 3,478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해외 독립운동, 사료 등의 시청각류, 한국 전쟁 시기의 군사지도 등 325점을 보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의 가장 중요한 기록물인 조사기록은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적대세력관련사건, 민간인집단희생, 인권침해로 나누고 있으며, 조사 결정된 사건이 총 3,965건이다.

두 번째 각 위원회 기록물의 소장가치를 살펴보면 강제동원진상규명위 「위원회 인정기록」은 강제동원 일시, 동원유형, 생존여부, 인원 등 강제동원의 객관적인 사실을 연구하고 교육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구술기록이 기록정보콘텐츠로 구축된다면 학생들에게 강제동원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어 강제동원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구술기록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제공된다면, 연구주제에 따라 해당자를 직접 인터뷰해야하는 수고로움을 덜게 해줄 것이다. 이 밖에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사진, 박물 등을 통해서 강제동원의 배경과 현실을 학습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3)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등과 관련해 발굴·입수한 자료 등을 내·외부 전문가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등에 활용코자 증거의 가치가 높은 자료에 대해 이른바 '동원사실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록'(약칭: '위인정')을 말한다.

4) 국가기록원 나라포털. [cited 2009. 9. 2].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llection/viewJapaneseIntro.do>>

줄 것이다.

‘반민규명위’의 기록물은 국내외의 신문, 기록물을 조사하여 나온 결과물인 친일행위자 조사기록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조사를 위해 수집한 신문, 기록물류는 대부분 사본이지만 원 소장처가 미국하와이대, 일본학습원대학, 일본 동경대학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의 기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물의 원 소장처를 정확히 밝혀서 콘텐츠화한다면 교육 및 연구를 위해 구하기 어려운 기록물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록물의 원 소장처를 밝힘으로써 다른 비슷한 연구를 위한 자료검색 통로도도 이용 가능할 것이다. 반민규명위 조사기록은 이런 국내외의 문서, 신문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통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완료된 결정이유서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주요경력, 법률적 근거, 친일경력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조사기록이 기록정보콘텐츠로 구축된다면 교육이나 연구목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친일반민족행위자 부분에 대해 쉽고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진실·화해위’의 경우도 반민규명위와 유사하게 위원회의 핵심이 되는 조사기록의 완성을 위해서 문서, 신문, 법원판결문, 형사기록, 구술기록 등 다양한 기록물을 조사, 수집하여 사본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 다양한 기록물을 통해서 한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있다. 수집기록 대부분이 사본이기는 하지만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 미국 등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해외 기록물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국립문서보관소(NARA), 미국 해군역사자

료센터(Naval Historical Center), 맥아더도서관, 의회도서관 등 해외 공공기록물 관리기관의 기록물을 다수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기록물은 위원회 내에서는 조사를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되지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에 있어서는 학습용과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집기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 조사기록은 한 건 한 건이 다양한 기록물의 복합적인 조사를 통한 결과물로 중요한 학습 및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3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념

원래 콘텐츠라는 용어 자체는 어려운 말이 아니다. ‘콘텐츠’가 형식에 담는 내용물이라고 한다면 예전부터 있었던 용어이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디지털형식과 만나 내용물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게 된 것이다.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내용물을 단순히 전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조화하고 각종 정보가 이용자 관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가공하여, 이용자가 우선적인 성격을 갖는 쌍방향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물을 이용한 콘텐츠화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 기록정보콘텐츠라는 용어를 처음 쓴 이윤경(2007)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행위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항상 염두에 두고 콘텐츠가 다루는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여 기록정보콘텐츠의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문콘텐츠 역시 역사적 맥락을 통해 그 문화를 복원하거나 역사

적 사실을 콘텐츠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만으로 기록정보콘텐츠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심성보(2007)는 기록정보콘텐츠를 “세분화된 고객의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객의 욕구에 기반을 두어 추가 제작하고, 기록정보와 함께 결합물이나 연속물의 형태로 조직화하여 배포되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로 정의했다. 즉 기록물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뿐만 아니라 정보라는 개념에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록정보콘텐츠 정의들을 토대로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첫째, 기록물을 콘텐츠화한다는 것은 증거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 기록물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이 콘텐츠화되더라도 그 출처가 분명히 제공됨으로써 콘텐츠화된 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수집한 기록물이나, 우연히 접하게 된 기록물, 업무활동을 통해 얻게 된 기록물 등을 콘텐츠화할 때에는 자칫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기관의 기록물을 이용한 콘텐츠구축은 저작권 문제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록물을 이용해 콘텐츠구축을 할 때에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콘텐츠구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활용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용에 편의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기록물을 이용한 콘텐츠구축에서 이용자의 요구 분석은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에 앞서 가장 중요한 사전작업이라 할 수 있다.

3. 외국의 과거사 관련 기록정보 콘텐츠 구축사례

3.1 미국 홀로코스트기념관

미국의 홀로코스트기념관은 홀로코스트 역사를 해석, 연구하고 기록화하기 위한 미국 국가기관이다. 이 기념관은 홀로코스트(the Holocaust)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통해 민주주의 강화와 인간 존엄성을 촉진하고 집단학살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한다. 기념관 주요임무는 학살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고 확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살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방문객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그들이 가지는 책임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도덕적 정신적 문제를 숙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공공-민간의 협력, 연방정부의 기념관 영속성에 대한 지원보장과 기증자는 기념관의 교육활동과 전세계적 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⁵⁾

3.1.1 홀로코스트기념관 콘텐츠구성

홀로코스트기념관 콘텐츠는 크게 이용대상자별, 주제별 분류로 기록물을 구성하고 있다. 이용대상자는 교사, 학생,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며 교사와 전문가를 위한 콘텐츠는 주제별 분류를, 학생을 위한 콘텐츠는 2차 세계대전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눠서 분류하고, 내부에 학습 사이트를 마련하여 5개의 대주제, 36개의 소주제를 구성하여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

5) 미국홀로코스트기념관 내용참고, [cited 2009.9.2.], <<http://www.ushmm.org>>.

인 전시관의 경우 11개의 대주제를 정하고 각 주제마다 세부주제를 설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교사를 위한 가이드(Guideline for Teaching)’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홀로코스트라는 개념뿐 아니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육을 위한 자료들(Resource and Material)’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모든 자료는 ‘PDF’ 파일로 제공되며, 세부내용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지도, 연혁, 역사, 도서관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메인 화면에서 시기에 따라 1933~1939년, 1939년~1945년, 1945년 이후로 분류하고 각 시기에 따라 주제별 분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사이트’라는 내부에 학습용 사이트를 따로 두고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각 시기의 내용에 들어가면 주제에 해당하는 그림,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한 단어들은 별도의 콘텐츠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사건에 대한 지도, 구술기록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사이트는 ‘나치의 통치’, ‘독일의 유대인’, ‘최종해결책’, ‘나치 캠프’, ‘해방과 저항’의 5개 대주제로 분류되고 그 세부내용이 36개의 소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온라인전시관은 사진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사진, 영상, 구술, 플래시, 아카이브즈가 총망라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홀로코스트기념관은 이용자별 분류와 온라인전시관이라는 하나의 전시관에서 주

제별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구성방식에 있어서는 교수, 학생, 전문가를 위한 콘텐츠 구성을 각각 눈높이에 맞춰 다르게 구성하고 있고, 온라인전시관도 주제별로 똑같은 콘텐츠 구성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3.1.2 홀로코스트기념관 기록정보콘텐츠 구성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구축 시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위해 기존 콘텐츠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콘텐츠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짓기 위한 재료와 설계도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콘텐츠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도 그 콘텐츠의 기록물과 기록물의 구성 방법일 것이다. 홀로코스트기념관도 상당히 방대한 주제들을 대주제와 소주제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홀로코스트기념관 기록정보콘텐츠를 항목별, 주제별 정리를 하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은 홀로코스트기념관의 기록정보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해 홀로코스트기념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홀로코스트기념관은 홀로코스트 관련 기록물을 가지고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게 콘텐츠를 구성하였으며, 그 중 온라인전시관은 대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세부주제를 나눠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있다.

〈표 1〉 홀로코스트기념관 기록정보콘텐츠 세부구조⁶⁾

| 대주제 / 시기 | 주제사안 기록정보콘텐츠 |
|--|---|
| 홀로코스트기념관 Education(For student) 메인페이지 | |
| 1933-1939 | 제3국의 독재 하에서 / 초기단계에서의 박해 / 최초의 강제수용소 |
| 1939-1945 |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 안락사 프로그램의 살인 유대인 박해와 살인범인가 / 이동적 살인 분대 등 |
| 1945년 이후 | 전후노력 / 난민 캠프와 이민 |
| 홀로코스트기념관 Education(For student) 학습사이트 | |
| 나치의 통치 | 1933년 히틀러 / SS 경찰국가 / 나치의 인종차별 안락사 / 나치테러 / 나치의 선전 / 제2차 세계대전 / 유럽의 점령 |
| 독일의 유대인 | 홀로코스트 유럽에서의 유대인 생활 반유대주의 / 유대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뉘른베르크의 인종차별정책(The Nuremberg Race Laws) 등 |
| 최종해결책 | 폴란드내 소수민족 / 소수민족의 삶 / The Mobile Killing Squads 나치고위급장교들의 회동(The Wannsee Conference)과 최종 해결책 At the Killing Centers / 국외추방 / 아우슈비츠 |
| 나치수용소 시스템 | 수용소의 포로 / “Enemies of the State” 강제노동 / 강제된 죽음(Death Marches) 등 |
| 해방과 저항 | 덴마크에서의 해방 / 유대인 뺑치산 / 바르샤바 소수민족의 반란 Killing Center Revolts / 전쟁난민 / 독일내부에서의 저항 |
| 홀로코스트기념관 Education(For Teacher) | |
|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의 자세 | Why teach about the Holocaust? / What Do I Teach? Guidelines for Teaching / Are you new to teaching about the Holocaust? |
| 교수 방법 및 주의할 점 | Resources and Materials / Personal Stories and ID Cards Lesson, Activities and Teacher Guides |
| 홀로코스트기념관 History(Online Exhibition) | |
| 수용소 | Bachwald 집단수용소 |
| 해방과 저항 | 덴마크의 유대인 구조 / 오스카션들러: 예기치 않은 영웅 바르샤바 빈미가의 반란 / 용기 있는 기억(Memories of Courage) 등 |
| 아이들 | 너의 아이들을 내나라(“Give me your Children”) 조용한 증인(Silent Witness) / 어둠의 삶(Life in Shadows) 등 |
| 미국 | 홀로코스트에 대한 미국의 응답 미국유대인의 관점(Jewish American Perspective) 등 |
| 반유대주의 | 반유대주의 |
| 박해(Persecution) | 장애인에 대한 나치의 박해 / 치명적 의학(Deadly Medicine) 동성애에 대한 나치의 박해 / 홀로코스트의 일반사항 등 |
| 후유증(Aftermath) | 해방 / 다시 태어난 삶 의사재판(The Doctors Trial) / 뉘른베르크 재판과 그들의 유산 |
| 소수민족(Ghettos) | 아이들 목록과 내용 중복 |
| 선전(Propaganda) | 나치 선전의 힘 나치올림픽: 베를린 1936년 |
| 문서와 증거 | 아우슈비츠 친위대의 눈을 통해본 나치수용소의 리더쉽(Auschwitz through the lens of the SS: Photos of Nazi leadership at the camp) 등 |
| 기억, 기념, 유산 |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관 엘리 위젤과 오프라 윈프리의 홀로코스트 이야기 |

6) 미국홀로코스트기념관 콘텐츠 재구성. [cited 2009. 9. 2]. <<http://www.ushmm.org>>.

3.2 폴란드 민족기억연구소

폴란드 민족기억연구소(The 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 Commission of the Prosecution of Crimes against the Polish Nation, 이하 IPN)는 전신인 중앙위원회가 1944년부터 전쟁 중에 폴란드에서 자행한 범죄에 대한 방대한 양을 조사하였고, 과거사조사위원회와 전쟁범죄조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앙위원회는 1950년 이전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였고,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사실상 연구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1998년 '민족기억연구소에 관한 법'이 통과됨으로써, 민족기억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중앙위원회는 IPN의 한 부서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⁷⁾

3.2.1 폴란드 민족기억연구소 콘텐츠 구성

IPN 콘텐츠는 메인화면에 연혁, 연구소소개, 뉴스, 국제협력, 출판, 중앙 및 출장소, 담당 및 연락처, 관련 링크로 이루어져 있고, 화면 우측에 중앙 및 지방의 공공교육 프로그램, 위원회 조사기록 현황 및 콘텐츠, Archives 소장현황 및 콘텐츠, Ventting 사무소의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IPN은 본부인 바르샤바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많은 사건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엄선된 25건을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조사내용 이외에 IPN이 발족하고 난 후 지금까지의 조사기록을 통계 낸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하고 있다. IPN 아카이브 현황은 기록물 종류, 콘텐츠제공, 접근방법, 생산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IPN이 소장한 모든 기록물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고, 생산 기록물의 종류, 기록물 접근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콘텐츠로 제공하는 것은 주로 사진이나 법원 판결 등 1차 자료를 스캔하여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형사재판, 법원판결 등 재판, 판결기록은 출처를 밝히고 있다.

3.2.2 폴란드 민족기억연구소 기록정보 콘텐츠 구성

IPN 콘텐츠는 연구소의 자세한 내용과 재판 기록, 기록물의 관리에 대해 자세하게 텍스트로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구축을 고찰하는데, 다양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도 이용자를 위해 필요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물이 콘텐츠로 표현되었는지도 참고하여야 한다. <표 2>는 앞서 살펴본 IPN의 기록정보콘텐츠를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IPN은 크게 사건별 기록물과 사진을 가지고 폴란드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보고서, 재판 기록물은 그 출처를 밝혀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IPN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조사활동, 당시 재판기록들을 공개함으로써 좀 더 전문적인 기록물을 일반인들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가장 핵심기록인 조사기록의 콘텐츠 구축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3 오스트리아 저항운동 문서화센터

오스트리아 저항운동 문서센터(Dokumenta-

7) 폴란드민족기억연구소 내용참고, [cited 2009.9.4.], <<http://www.ipn.gov.pl>>.

〈표 2〉 민족기억연구소 기록정보콘텐츠 세부현황⁸⁾

| 대주제 | 주제사안 기록정보콘텐츠 |
|--|---|
| Commission | |
| Selected Investigations | Podbeskidzie 지역의 살인사건 / 1944.6월 16일 Bełże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 인들에 의한 폴란드인 살인사건 등 주요 사건 27건 |
| Report | Excerpts from the Report on "Efforts to Prosecute Nazi War Criminals(01.01.2001 ~31.03.2002)," based on the questionnaire of Simon Wiesenthal Center |
| Statistical Data | STATISTICAL DATA(concerning activities of the Branch Commissions for the Prosecution of Crimes against the Polish Nation From July 1st, 2001 to September 30th, 2002) |
| Archives | |
| Archival Resources | IPN 소장기록물 현황 참고 |
| 바르샤바 반란 기념일 | 인물위주의 사진 41장 제공 |
| funeral of Father Jerzy Popiełuszko. | 장례식 사진 포함 총 33장 제공 |
| 1939년 9월 17일 소련침략 | 당시 사진 13장 제공 |
| 1939년 9월 폴란드 침략 | 당시 사진 45장 제공 |
| Pilgrimages to the Shrine in Częstochowa. | 당시 사진 18장 제공 |
| 1983년 5월 1일 브로츠와프 불법 퍼레이드 | 당시 사진 72장 제공 |
| 1983년 5월 31일 바르샤 불법시위 | 간단한 설명과 당시 사진 11장 제공 |
| 1983년 5월 1일 브로츠와프 불법 퍼레이드 | 간단한 설명과 당시 사진 7장 제공 |
| 동부 갈라시아에서 열린 기념식 - 폴란드 대학살 - ("Wołyń - Eastern Galicia i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xtermination of Polish Population") | 범죄보고서 15건[출처: 0192/336 v. 29, Operational Acts concerning Józef Humeniuk, 1949, k. 9, 12, 25, 26, 31-34] 폴란드 시민 고문에 대한 재판 비난문 3건[출처: 27th Wołyń Division of the Home Army, Nabytki 638, 1985, k. nlb] 등 기록물 총 53건 제공 |

tionsarchiv des Österreichischen Widerstandes, 이하 DÖW)는 과학과 인류사회에 헌신하는 학자, 나치즘 박해의 희생자와 오스트리아 저항운동 이전 구성원에 의해 1963년에 설립되었다. 1983년까지 이 센터의 창시자이자 지도자는 영국 망명으로부터 돌아온 Herbert Steiner였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DÖW는 어떤 하나

의 정치정당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모든 민주주의 운동단체를 포괄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⁹⁾

3.3.1 오스트리아 저항운동 문서화센터 콘텐츠 구성

DÖW 콘텐츠는 아카이브즈, 도서관, 전시실,

8) 폴란드민족기억연구소 콘텐츠 재구성. [cited 2009, 9. 4]. <<http://www.ipn.gov.pl>>.

9) The Documentation Centre of Austrian Resistance(DÖW). [cited 2009. 9. 5]. <<http://www.doew.at/english/history/content.html>>.

문서센터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다. 아카이브즈는 기록물을 유형별로 나누어 어떤 기록물들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고, 도서관은 문서화센터에서 보유하는 도서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DÖW 콘텐츠 중에서 가장 눈에여 볼 곳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사진, 인적사항 등의 서비스제공과, 구술기록의 콘텐츠화, 다양한 기록물의 출처 제공이다.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당시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여 프로필과 상황에 대해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희생자들의 인적사항을 통해 생사여부, 사는 장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홀로코스트 희생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희생자의 증언과 사진, 박물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현재 DÖW에는 비엔나 게슈타포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4,600여명의 희생자 사진이 유대인, 로마인과 집시, 외국인 노동자, 개별적 저항활동, 노동자, 기독교 보수진영, 로마 카톨릭, 여호와 증인의 8개 주제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고, 희생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면 여러 검색 조건 없이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DÖW는 단순 사진 제공 이외에 62,000여명의 홀로코스트희생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게슈타포수용소(Gestapo-Opfer), 쇼와수용소(Shoah-Opfer)로 나뉘서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동원유형을 통해 희생자들이 현재 사는 곳, 또는 사망한 장소 등을 검색 가능하게 콘텐츠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지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1942년도 유럽 지도와 2001년도 유럽의

지도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어, 지명의 변경과 지명의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DÖW에서는 1982년 이후 구술역사프로젝트를 실시하여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에 저항하거나 기소를 당한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80여명의 인터뷰 중 발췌한 160개의 구술기록을 사진, 당시 기록물 등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¹⁰⁾

DÖW 구술기록 콘텐츠 현황의 특징은 160개의 구술 내용을 그 주제에 맞는 사진이나 기록물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콘텐츠의 사진과 기록물은 출처를 밝히고 있어 구술기록 콘텐츠를 보다가 관련 사진이나 기록물을 찾고 싶을 때에는 출처를 바탕으로 쉽게 원 기록물을 찾을 수 있게 구성하고 있다. 기록물을 이용한 기록정보콘텐츠구축에서 기록물의 출처를 밝히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그런 면에서 DÖW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는 상당히 잘 정리되어 제공되고 있다. 기록물 중 직접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뿐 아니라 외부에서 인용한 기록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에 있어서도 꼭 활용하여야 할 부분이다.

3.3.2 오스트리아 저항운동 문서화센터 기록정보콘텐츠 구성

DÖW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정보콘텐츠 중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에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홀로코스트 희생자 데이터

10) Auszüge aus der Publikationsreihe 내용참고. [cited 2009, 9. 5]. <<http://www.doew.at/>>.

〈표 3〉 오스트리아 저항운동 문서센터 기록정보콘텐츠 세부현황¹¹⁾

| 대주제 | 주제사안콘텐츠 |
|------------------------|--|
| 희생자 데이터베이스 제공현황 | |
| 사진 | 유대인[606건의 사진] 로마인과 집시[18건의 사진] 외국인 노동자[306건의 사진] 개별적 저항활동[1,572건의 사진] 노동자[1,566건의 사진] 기독교 보수진영[420건의 사진] 로마 카톨릭[54건의 사진] 여호와 증인[102건의 사진] * 총 4644명의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혐의 등의 기록과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 희생자 현황 | 게슈타포수용소(Gestapo-Opfer) / 쇼와수용소(Shoah-Opfer) 홀로코스트 희생자 62,000명 등록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및 피해자, 강제퇴거 날짜, 사망날짜 및 사망 장소, 마지막 거주지 장소 현황 제공] |
| 구술기록 콘텐츠 | |
| 구술자 | “현대사의 증언”[증거 기록물 출처: Schutzhaftbefehl gegen Hubert Wingelbauer, 24. 9. 1940.] / “붉은색 깃발 아래”[사진출처: DÖW Foto 7005] / “언제 게릴라 군이 올지”[증거기록물 출처: Erzählte Geschichte der Kärntner Slowenen, S. 56.] 등 160건의 구술기록 콘텐츠가 증거기록물의 출처와 함께 제공 |

를 활용한 서비스제공과, 사진제공, 희생자 구술기록을 통한 홀로코스트 현황, 그리고 모든 사진과 기록물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중점으로 DÖW 기록정보콘텐츠를 정리해보면 위의 〈표 3〉과 같다.

이상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을 위한 외국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 홀로코스트기념관의 교사·학생용 콘텐츠 구성안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시 주요 교수법과 화려한 콘텐츠로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에 도움이 될 수 있었고, 폴란드 민족기억연구소의 조사기록 현황과 통계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조사기록의 콘텐츠 방안에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저항운동 문서센터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검색서비스는 과거사 관련 위원

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중 강제동원진상규명위의 강제동원 희생자 검색서비스 구축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4.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 콘텐츠 구축방안

4.1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이용 요구 분석

본 조사는 한국 근·현대사 강의를 하는 교·강사, 과거사 관련 위원회 종사자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연구하는 역사연구자, 사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물의 콘텐

11) 오스트리아 저항운동 문서센터 주요내용 재구성. [cited 2009. 9. 5]. <<http://www.doew.at/>>.

츠 구축방안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기존의 설문조사가 현재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조사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콘텐츠의 이용요구를 파악하여야 하였기에 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설문조사 전 먼저 대략적인 콘텐츠 구축 모델을 제시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콘텐츠 모델을 보고 관심의 정도와 실효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10월 5일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현황은 <표 4>와 같다.

먼저 교·강사 및 학생들의 경우 기록정보콘텐츠의 활용도 설문조사는 식민지 배경설명, 항일독립운동, 친일행위자, 강제동원 진행사항, 강제동원 현실, 귀환과정, 강제동원 현재 상황, 해방과 공산주의, 한국전쟁, 군사독재, 민주화와

학생운동 11개 항목으로 나누고, 해당 콘텐츠를 직접 접해본 적이 있는지, 콘텐츠의 연구적 활용가치, 연구와 관련성에 대해 물어보았다.

교·강사들의 경우 비교적 접근하기 힘든 강제동원의 귀환과정과 현재생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다는 답변을 하였다. 해당 항목을 콘텐츠로 구축할 때 교육적 활용가치와 교육적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과거사위원회 사이트 방문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4명 모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방문 의도는 3명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1명은 호기심으로 사이트를 방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두 번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물을 이용한 교육용 콘텐츠로서의 활용효과와 가치, 콘텐츠 개발 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로 물어보았다.

먼저 활용효과 측면에서는 교수의 교재 연구 시 아이디어제공(객관적 기록물을 통해)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고, 교수와 학습자에게 기

<표 4> 설문조사자 현황¹²⁾

| 구분 | 대상 / 인원(명) | | 세부현황 |
|--------|---|----|---------------------------------|
| 교수·학생용 | 교수 | 4 | 대학교 근현대사전공자 교·강사 4명 |
| | 학생 | 20 | 사학과 재학생 2학년 5명, 3학년 10명, 4학년 5명 |
| 연구자용 | 박사졸업 이상 | 4 | 근현대사전공 3명 / 중세사전공 1명 |
| | 박사 재학 | 3 | 박사과정 재학 중(근현대사 전공) 3명 |
| | 석사졸업 이상 | 3 | 근현대사 전공자 3명 |
| 계 | 34명(근현대사 전공 13명, 중세사 전공 1명, 사학전공 대학생 20명) | | |

12) 본 설문조사는 교수·학생 / 연구자로 나뉘어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근·현대사를 전공한 교·강사와 역사연구자는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학생용 설문조사에서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교·강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역사연구자용 설문조사에서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 중 별도의 강의는 하지 않고 연구 중인 연구자를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교육용, 연구자용으로 나뉘 실시하여 콘텐츠구축을 위한 설문조사가 겹치거나 동일인이 상반되는 답변을 하는 등의 문제점은 없도록 하였다.

록의 중요성 인식에 기여, 교수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 용이, 학습자의 흥미 유발 및 참여도 증진,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배양 순으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교육용 콘텐츠로 활용가치가 낮다면 그 주요원인이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기록정보콘텐츠의 접근이 어렵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방향과 연계성이 미비,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어 객관성 유지가 어려움, 교수와 학습자들이 기록물을 활용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음, 목적에 맞는 콘텐츠가 없다는 순으로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록물의 발굴과 소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원문서비스를 위한 기록물의 공개 확대, 강의계획과의 연계, 객관성을 잃지 않는 기록물 재구성 작업, 타(과거사 이외 기관 등)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순으로 답변하였다.

학생들의 경우 기록정보콘텐츠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과는 달리 강제동원의 진행 사항, 현실 귀환의 과정에 대해 20명 중 13명이 몇 번 들어보거나 접해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해방이후 현대사에 대해서도 몇 개는 안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그 외에 콘텐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의견이 13명이어서 해당 콘텐츠에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항목을 콘텐츠로 구축할 때 교육적 활용가치와 교육적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6명이나 되었다. 특히 강제동원에 대한 콘텐츠구축에 대해서 주로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였다. 물론 이 의견이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설문조사한 학생들의 평균 답변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교·강사보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 콘텐츠 활용의 필요성을 덜 느끼거나, 교육 커리큘럼의 변경이나 다른 교재의 활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사이트 방문에 대한 질문에서는 답변자 20명 전원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답변한 학생들이 사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대부분의 대학생이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사이트 방문도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물을 이용한 교육용 콘텐츠로서의 활용 효과에 대해서도 교·강사의 답변과 차이가 있었다. 교·강사들은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수의 교재 연구 시 아이디어 제공에 가장 큰 활용 효과를 느끼는 반면, 학생들은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의 배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변하였고, 그 뒤로 교수와 학습자에게 기록의 중요성 인식에 기여, 학습자의 흥미 유발 및 학습자의 참여도 증진, 교수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 용이, 교수의 교재 연구 시 아이디어 제공 순으로 답변하였다. 교육용 콘텐츠의 활용가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교·강사와 마찬가지로 기록정보콘텐츠 접근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목적에 맞는 콘텐츠가 없음,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어 객관성 유지가 어려움, 교육방향과 연계성 미비, 교수와 학습자들이 기록물을 활용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순으로 답변하였다.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강사의 답변과 달리 강의계획과의 연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고, 객관성을

있지 않는 기록물 재구성 작업, 원문서비스를 위한 기록물의 공개 확대, 새로운 기록물의 발굴과 소개, 타(과거사 이외 기관 등)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순으로 답변하였다.

역사연구자 기록정보콘텐츠의 활용도 설문 조사는 식민지 전반, 친일현황,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배경 및 진행사항, 강제동원 현황, 강제동원현실, 강제동원 현재 상황, 해방 이후, 한국전쟁, 군사독재와 민주화 10개 항목으로 나눠 해당 콘텐츠를 직접 접해본 적이 있는지, 콘텐츠의 연구적 활용가치, 연구와 관련성에 대해 나눠 물어보았다.

해당 콘텐츠에 대해 접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식민지 전반, 친일현황, 항일독립운동에 대해서는 10명 모두 '몇 개는 안다'와 '대부분 안다'는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그 외 강제동원부터 해방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접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과 '몇 개는 안다'는 답변으로 나뉘었다. 해당 콘텐츠의 연구적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매우 높은 편이라 대답하여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물의 활용가치를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해당 콘텐츠 구축 시 연구와 관련성을 묻는 말에서는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에 따라 다른 답변들이 나왔다. 일제 전시체제에 대해 연구한 연구자는 식민지 전반과 친일현황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답변을 하였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다. 반면에 조선시대 외교기록물을 연구한 연구자는 전반적으로 연구와 상관은 없지만, 이 기록물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는 가정 하에 '매우 관련이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외 일제강점기 문화 통치, 영친왕 등에 대한 연구자들도 전반적

으로 '매우 관련성이 높다'는 답변을 하였다.

과거사위원회에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10명 모두 '몇 번 방문했다'는 답변을 하였고, 8명은 자료를 찾기 위해 2명은 호기심으로 방문했다고 답했다.

두 번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물의 역사 연구를 위한 콘텐츠로서의 활용효과와 가치, 콘텐츠 개발 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로 물어보았다. 먼저 활용 효과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연구 시 1차 기록물 활용의 편의성에 대해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고, 다양한 연구 자료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는 편의성, 연구 시 객관적인 자료 제공(객관적 기록물을 통해), 연구를 위한 기록의 중요성 인식에 기여, 연구자의 다양한 사고의 배양 순으로 답변하였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의 연구용으로 활용가치가 낮다면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기록정보콘텐츠에 접근이 어렵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주제에 맞는 콘텐츠가 없어서, 연구방향과 연계성이 미비한 점, 연구자들이 기록물 콘텐츠를 활용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점,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어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순으로 답변하였다. 연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록물의 발굴과 소개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고, 원문서비스를 위한 기록물의 공개 확대, 타(과거사 이외 기관 등)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연구방향과의 연계, 객관성을 잃지 않는 기록물 재구성 작업 순으로 답변하였다.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교·강사와 학생, 연구자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강사, 연구자들과는 달리 학생들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시 홍보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2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방안

4.2.1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기록물 선별 지침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콘텐츠 구축을 위한 기록물 선별 작업이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 모두가 콘텐츠로 구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기준으로 위원회 기록물 중 교수·학생용 및 역사연구자용 콘텐츠 구축 대상 기록물을 선별할 지에 대한 사항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물을 선별하여 기록정보콘텐츠로 구축하려면,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이 ① 단순한 1차 사료가 아니라, 국가의 운영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따르는 공적 문서라는 점, ② 조사기록은 생산기관이 분명하고, 출처가 훼손되지 않은 기록물이라는 점, ③ 이미 어떤 원칙과 지침에 따라 그 기관에 보존된 기록물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원칙과 이유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유의사항을 들어 콘텐츠 구축 대상 기록물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첫째, 교육내용이나 사료 선정의 일반 원칙과 기준을 충분히 참고하되, 과거사 관련 위원회 현실을 잘 반영하여 기록물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을 선별하는데 있어 그 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

고서는 선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며, 그 기록물 중에는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기록물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위원회 기록물이 학습용으로 이용될 때, 주교재가 아닌 부교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록물 선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이 아무리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지만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검증된 교재들을 배제하고 주 교재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물은 부교재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역사연구용 콘텐츠로 구축될 시 1차 사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역사연구자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많은 1차 사료 및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기록물을 선별한다면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이므로, 역사연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록물을 선별하여야 할 것이다.

4.2.2 교수·학생을 위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교수·학생용 기록정보콘텐츠에서 주 대상은 교수와 학생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러 종류의 학생 가운데서도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록정보콘텐츠를 구축해 보려고 한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범위가 특정 시점에 한정되어 있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 대부분이 전문성을 가진 기록물이므로 대상을 대학교 교양과목 이상의 한국 근·현대사 과목으로 잡았다.

〈표 5〉는 2009학년도 1학기 H대학교 한국

〈표 5〉 2009학년도 1학기 H대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양과목 강의계획표

| 교재 / 참고문헌 | Week | Contents |
|---|-----------|-------------------------|
| 강만길, 20세기우리역사, 창비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비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비 | 1st week | 강의소개 및 수업 오리엔테이션 |
| | 2nd week | 조선후기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 | 3rd week | 근대주의 |
| | 4th week | 동아시아 3국의 개항과 서구제국주의의 충격 |
| | 5th week | 1860년대의 위기와 개항 |
| | 6th week | 19세기 후반의 정치적 알력 I |
| | 7th week | 19세기 후반의 정치적 알력 II |
| | 8th week | 시험 |
| | 9th week | 식민지 I |
| | 10th week | 식민지 II(근대화) |
| | 11th week | 해방과 공산주의 |
| | 12th week | 해방과 원조경제 |
| | 13th week | 한국전쟁 I (전쟁원인) |
| | 14th week | 한국전쟁 II |
| | 15th week | 민주화와 학생운동 |
| | 16th week | 시험 |

근·현대사 교양과목 강의계획표로 이 강의계획표를 참고로 하여 콘텐츠 구축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교수와 학생으로 대상을 분류하고, 교수를 위한 교육용 콘텐츠 구축에서는 미국의 홀로 코스트기념관 'For teacher'의 'Guideline for Teaching'처럼 학생들에게 근·현대사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당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지침을 교육받도록 한다.

학생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구축은 H대학교 강의계획표를 기본 바탕으로 하며 설문조사의 내용을 참고로 1차적으로 구축한 각 위원회 기초콘텐츠를 가지고 주제에 따라 연계시키게 된다. 이 주제사안의 구성범위는 크게 식민지시기, 해방 이후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식민지 시기 내에 식민지 배경, 항일독립운동, 친일행위

자, 강제동원희생자로 나누고, 해방 이후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 군사독재시기, 민주화로 나누어 구성한다.

시기에 따라 주제별로 구성된 기록정보콘텐츠는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자 요구분석을 통해 대주제, 중주제, 주제사안으로 범주화되며, 그 구체적인 안은 〈표 6〉과 같다.

〈표 6〉은 교수·학생을 위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주제사안 분류체계로 기록정보콘텐츠 구성안의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수정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이 콘텐츠들을 접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콘텐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배경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교·강사의 경우도 관련분야를 전공하지 않았다면 모를 수 있는 강제동원희생자의 당시 상

항, 귀환 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영상과 배경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콘텐츠 개발 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기록물 발굴과 함께 기록

정보콘텐츠의 업데이트, 콘텐츠와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높이는 작업을 필요로 하였으므로 이 점에도 유의하여 콘텐츠를 구축하여야 한다. 위 사항들을 참고하여 구성된 <표 6>의 내용

<표 6> 교수·학생용 주제사안 분류체계

| 대주제 | 중주제 | 주제사안 |
|-------------------------------|--------------|--|
| [For Teacher] | | |
| 강의를 위한 TIP | 가르치기 위한 자세 | 과거사에 대해서 왜 가르쳐야 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온라인상의 교육 워크숍 |
| | 교수방법 및 주의할 점 | 수업을 위한 필수 주제 확인 기록물의 출처와 원 기록물 제공 가이드를 통한 훈련 지침 등 |
| [For students] | | |
| 식민지 I 일제통치와 독립운동 | 식민지 배경설명 | 신문을 통한 식민지상황(경성일보, 조선신문, 만선일보 등) 전시체제하 조선총독부 외곽단체 자료집 등 (식민지 관련 영상자료, 사진자료 다수 첨부)[반민규명위] |
| | 항일독립운동 | 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 사건 등 정용산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사건 등 (잘 알려진 인물과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해심을 높여줌) [진실·화해위] |
| | 친일 행위자 | 정치 분야 : 매국, 수작, 중추원 통치기구분야: 관료, 사범, 군인, 헌병, 경찰 경제사회분야: 경제, 교육, 단체 문화분야: 학술, 언론, 종교 / 해외부문 (잘 알려진 친일행위자의 분석을 통해 이해심을 높여줌) [반민규명위] |
| 식민지 II 1930~40년대 강제동원상황 | 강제동원 진행사항 | (군사훈련, 광업소 단체사진 등 사진, 박물 등을 적극 활용 이해를 도움) 각 지역별 노무피해자 현황 / 군인피해자 현황 / 군속피해자 현황 / 동원자 현황 / 병적전시명부 / 병상일지 등 |
| | 강제동원 현실 | (인터뷰 영상, 사진, 박물 등 적극 활용 이해를 도움) 동원 유형별 진상조사 구술면담 / 마을 사람 진술을 통한 당시 상황 진상조사 구술면담 등 |
| | 귀환과정 | (일제시대 지도, 귀환관련 논문 등을 이용, 기초 배경 설명) 아키비라 광업소 귀전자 명부/남양군도 귀환자 명부 등 |
| | 현재상황 | (영상을 적극 활용 이해를 도움) 생존귀환자 면담조사 / 생존자 부상 사진 / 생존자 방문조사 보고서 / 당시 마을 방문조사 보고서 등 [진상규명위] |
| 해방이후 현대사 | 해방과 공산주의 | (해방 이후 자세한 배경 설명 이후 구체적인 사건 설명) 진보당 조봉암 사건 |
| | 한국전쟁 |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등 |
| | 군사독재 | 태영호 납북사건 /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 사건 제일교포 복송저지 공작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등 |
| | 민주화와 학생운동 |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 [진실·화해위] |

을 분석해 보면 가령 '식민지시기 강제동원의 현실과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다면 수업에 앞서 교·강사들은 학습 주의사항을 충분히 교육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질문에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지 않는다.", "일제 식민지시기 교육에 의해 학생들이 모든 일 본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게 주의한다." 등의 내용이 될 것이며, 이 내용은 강의 시작하기 전 모든 콘텐츠 앞부분에 나타나도록 구축하여 교·강사들의 교육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 후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되면, 교·강사들은 식민지Ⅱ 1930-40년대 강제동원상황(대주제) - 강제동원 진행상황(중주제) - 유수명부, 병적전시명부, 병상일지, 피징용사망자명부(주제사안) 등으로 들어가서 1차 자료를 콘텐츠로 구축되어 있는 화면을 통해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은 유수명부를 통해 철도부대, 항공부대, 농경부대 등 강제동원 부대상황, 사망, 행방불명, 도망 여부 등 당시 희생자의 생생한 사실과 어떤 병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였으며, 보수는 얼마나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까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유수명부와 병적전시명부, 병상일지의 연계를 통해 'O'라는 강제동원 희생자가 훈련 중 도망을 가다 어디서 붙잡혔으며, 훈련 중 어떤 병을 얻어 병원에 가게 됐고, 병명, 진료연월일, 발병일자, 초진일자, 입원일자, 퇴원일자, 현재의 증상, 입원 당시 군의의 소견, 치료기록까지 자세한 사항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1차 자료를 기록정보콘텐츠로 구축하여 학생들이 책 위주의 수업보다는 현실감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객관적인 명부에 기록되어있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유가족 등과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당사자가 유가족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개인 신상을 삭제하고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염두 해두어야 할 것이다.

4.2.3 역사연구자를 위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역사연구자를 위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은 교수·학생용 기록정보콘텐츠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기보다는 간결하고, 보기 쉽게 구성하는 것이 이용자들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를 위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역사연구자들이 과거사와 관련된 어떤 논문들을 썼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표 7>은 현재 '한국 근·현대사학회', '한국 근·현대사연구회'에서 발행된 연구 논문 중 과거사와 관련된 논문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7>의 연구 논문들의 참고문헌 중 1차 자료는 독립신문, 매일신보, 중의일보 등 당시 신문들과 국회 마이크로필름 자료 등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연구논문들에 1차 자료가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이 편리하다면 더 많은 1차 자료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에서 조사된 연구논문들을 바탕으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구축한 각 위원회 기초콘텐츠를 바탕으로 대주제를 식민지시기, 해방 이후시기로 나누고 대주제별 중주제, 주제사안에 따라서 기초콘텐츠

〈표 7〉 한국 근·현대사 관련 연구논문 현황¹³⁾

| 유형별 | 연구논문주제 |
|------|---|
| 식민지 |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반민특위 충청북도 조사부의 조직과 활동” |
| 강제동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철도 한인 포로감시원의 운명” “일본 내 한인의 귀환과 한국 내 일본인 송환에 관한 해방직전 미국 측 자료” / “만주지역 독립운동가 유해봉환사업 추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 총사령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귀환정책” / “해방이후 BC급 전범이 된 한국인 포로감시원” |
| 항일운동 | “1910년~1920년 중반 북경한인사회와 민족운동 특징” “1920년대 함흥지역 학생운동의 전개와 성격” |
| 해방이후 | “해방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선과 통일운동”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과 통일국가의 모색” “1950년대 중·후반 대한노총 중앙조직의 파벌대립양상과 그 성격” “지방사 연구방법, 실제, 역사교육 - 광주·전남지방의 민족 운동사를 중심으로 -” / “6·3항쟁의 역사적 의미” / “노근리 사건의 의의” |

츠를 연계하여 기록정보콘텐츠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강제동원 희생자 검색서비스를 추가하여 역사연구자들뿐 아니라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세부 구성안은 〈표 8〉과 같다.

이렇게 구성된 〈표 8〉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반적인 내용은 교수·학생용 기록정보콘텐츠와 비슷하나 중주제의 세분화를 줄이고 주제사안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일주일 단위, 주제별로 강의하는 교수·학생용 기록정보콘텐츠와는 차별을 두었다. 가령 강제동원 상황에 대한 교수·학생용 기록정보콘텐츠에서는 “중일전쟁시기 강제동원상황(대주제) - 강제동원 진행상황(중주제)”으로 나뉘었으나 역사연구자용 기록정보콘텐츠에서는 “식민지시기(대주제) - 강제동원(중주제)”과 같이 포괄적으로 구성하

였다. 이는 역사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포괄적인 주제 내부에 상세한 주제사안을 담으로써 하나의 연구주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연구자가 ‘강제동원 노무자의 현실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연구한다고 가정하면, 식민지시기(대주제) - 강제동원(중주제)으로 들어가서 강제동원 배경(주제사안)에서 ‘자유한인보’, ‘전시하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 강제연행자료집’ 등을 통해 강제동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강제동원현황(주제사안)에서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를 통해 당시 작업장, 입소 경로, 직종, 미불금 종류, 퇴소 시의 대우 등을 확인하여 강제동원 노무자의 당시 사정을 확인할 수 있고 ‘소위 조선인정용자에 관한 명부’¹⁴⁾를 통해 광부명부, 채용연월일, 고용기간, 퇴직수당 지급여부, 담배·술 등 지급 여부 등 당시

13)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 근·현대사연구회 검색. <<http://www.dbpia.co.kr/>>.

14) 한국정부의 강제연행자명부 이관요청에 따라 1991년 3월 외무부를 통해 한국정부로 인계받은 명부 중 한 종류로서,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별로 27,949명이 수록되어 있다.

〈표 8〉 역사연구자용 주제사안분류체계

| 대주제 | 중주제 | 주제사안 | | |
|-----------------------|-------------|--|---|--|
| 식민지 시기 | 식민지 전반 | 조선식산은행 및 기업영업 보고서 자료 M/F(일본국립공문서관 츠쿠바분관 동척관련자료 일본 재등실(齋藤實)기념관 소장자료: 시사평론, 차대조선) 국민신문(1939~1942년), 조선신문(1917~1921년) 등 [반민규명위] | | |
| | 친일현황 | 친일현황 1기, 2기, 3기 4개 부문 13개 분야 | | |
| | | 1기(1904~3·1운동) | 이완용, 송병준 등 총 1,005명 [반민규명위] | |
| | | 2기(3·1운동~중일전쟁) | | |
| | 3기(중일전쟁~해방) | | | |
| | 항일독립운동 | 1910년대 | 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 사건 등 | |
| | | 1920년대 | 정상윤의 신간회 평북 철산지회 결성활동 박원근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사건 등 | |
| | | 1930년대 | 박창래의 여수수산학교 학생운동 사건 등 [진실·화해위] | |
| | 강제동원 | 강제동원 배경 | 『자유한인보』 / 『전시하조선인중국인연합군강제연행자료집』 등 위원회 발행, 수집 자료 (사진, 박물 등 강제동원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 | |
| | | 강제동원 현황 | (명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소위 조선인징용자에 관한 명부, 강제동원위원회 조사기록(동원유형, 피해사항), 부로 ¹⁵⁾ 명표 등 | |
| | 강제동원 | 강제동원 현실 | (강제동원 현실에 대한 문헌, 영상 추가) 사할린 진상조사구술면담, 아소탄광 진상조사 구술면담, 남양군도 진상조사 구술면담 등 | |
| | | 귀환/현재상황 | (강제동원 귀환에 대한 영상, 문서, 사진 추가) 남양군도 귀환자 명부 현재 생존자 진상조사 구술면담 등 [진상규명위] | |
| 강제동원 희생자 검색서비스 | | 대상/동원유형/성명/생년월일(대상 11만 여명) | | |
| 해방이후 현대사 | 해방이후 | 반탁 운동가들의 소련유형사건 / 무주지역 적대세력 사건 제헌의원선거 청원군 강외면 제5투표소 야경원의 좌익세력에 의한 폭살사건 등 | | |
| | 한국전쟁 | 나주동창고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 고양 금정굴 사건 / 문경 석달사건 / 예천 산선동 미군폭격 사건 고창에서 김창용 등에 의한 좌익세력 집단 희생사건 | | |
| | 군사독재 민주화 | 남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의혹 조작 사건 재일교포 복송저지 공작사건 /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김익환 일가 고문 가혹행위 사건 /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진실·화해위] | | |

광업소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강제동원현실(주제사안)에서는 '사할린 진상조사구술면담' 등의 당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진술을 통해 객

관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귀환/현재상황(주제사안)에서는 '아키비라 광업소 귀환자 명부', '남양군도 귀환자명부' 등을 통해 강제동원

15) 포로와 같은 의미임.

희생자들의 귀환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연구자를 위한 콘텐츠는 한 주제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를 할 수 있게 커다란 대주제 - 중주제 내부의 다양한 주제사안을 돕으로써 연구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기록정보콘텐츠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지면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인터뷰 등의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필요한 1차 자료는 기록정보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출처를 통해 원본을 확인할 수 있고, 그곳에서 더 많은 관련 기록물을 찾을 수도 있게 된다.

이외에 대주제인 식민지시기와 해방 이후 현대사 사이에 강제동원희생자 검색서비스를 독자적으로 구성해 놓았다. 이는 교수·학생, 역사연구자를 위한 기록정보콘텐츠 이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강제동원희생자의 현 상황을 알려주는 검색서비스의 필요성 때문이다. 실제 오스트리아 저항운동의 문서화센터에서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시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강제동원진상규명위에서 “동행자 찾기”라는 콘텐츠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다.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시 강제동원희생자 검색서비스가 구축된다면, 검색분류시스템은 동원별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기타로 나누고 연도별 1930년대, 40년대, 40년대 이후 해방까지, 장소별 국내, 국외로 분류하며, 검색 내용은 오스트리아 저항운동의 문서화센터의 홀로코스트희생자 검색서비스를 참고하여, 희생자의 동원유형, 성별, 현재 사는 위치, 사망한 희생자는 사망일시와 살았던 곳이 포함되며, 위로금

의 지급 여부를 밝혀 희생자의 유족들이 희생자의 현 상황과 지원 여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동원진상규명위의 여러 명부를 연계하여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전사(戰死)하거나 병사(病死)하였을 경우, 사유를 자세히 밝혀 줌으로써 유가족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을 위해서는 위원회 기록물을 파악하고, 그 기록물의 특성 또한 자세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기록물의 특성을 알아야 기록물의 선별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선별된 기록물을 통해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전문가와 기록연구사, DB를 위한 업체, 콘텐츠 구축 업체가 협조관계를 이루어야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 제시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은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한 콘텐츠 구축 이전에 가능성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제대로 된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글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물의 활용방안에 중점을 두었고 그 방안으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설립취지와 활동성과 등을 살펴 보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에 필요한 위원회 소장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용어 정리를 하였는데 이는 자칫 기록정보콘텐츠구축이 창작콘텐츠와 같은 보여주기 중심의 콘텐츠로 구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반콘텐츠와 인문콘텐츠,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념을 비교 분석하고,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오프라인상의 기록관리와 온라인상에서 재구성되어 구축되는 콘텐츠 구축의 비교를 통해 기록관리와 콘텐츠구축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 선진사례를 살펴보았다. 앞서 조사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소장기록물 현황과 외국의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수·학생, 역사 연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요구를 분석

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구축을 시도하였고, 선진사례도 충분히 반영하려 하였다. 이외에 위원회 기록물의 선별지침을 만들어 실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여러 방법론과 앞서 조사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 소장기록물 현황을 바탕으로 기록정보콘텐츠 구성안을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

이 글에서 구축방안으로 제시한 모델이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의 완벽한 모델은 아니다. 하지만 폐지 기간이 다가오는 각 위원회의 기록물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였고 그 방안으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을 시도하여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가 실제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기록물현황 파악과 더불어 그 기록물의 특성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문가, 과거사 관련 역사전문가 등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미현. 2007.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기록학연구』, 16: 303-339.
- 김기덕. 2003. 콘텐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1: 2-3.
- 김기덕. 2003. 콘텐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1: 5-27.
- 김남석. 1988. 국가문헌의 수집과 보존. 『도서관논집』, 15: 79-111.
- 김득중. 2005. 민간인학살 기록현황과 수집, 관리방안, 『한국기록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기록학회 광복 60주년 종합학술대회 제4차, 2005.8.
- 김민철. 2005.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20: 275-287.
- 김민철. 2005. 친일기록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

- 록학회 광복60년 종합학술대회 제4차』, 79-103.
- 김인에. 2008. *중등사회교육을 위한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방안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록보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논문.
- 김정희. 2008. *과거사 규명을 위한 조사기록 관리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호. 2008. *아카이브즈 기록정보콘텐츠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2008. *아카이브 활용과 역사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경환. 2008. *기록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국학연구』, 12: 313-341.
- 박영환. 2006. *기록정보 콘텐츠 구축 현황과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7-42.
- 배나경. 2008.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논문.
-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 2006.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65-92.
- 서중석. 2007. *과거사 진상규명의 점검과 향후과제*. 『역사비평』, 가을호(통권 80호): 46-79.
- 설문원, 김익한. 2006. *이승만시기 국무회의록과 정부부처 기록의 연관 구조분석에 기반한 역사 콘텐츠 설계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115-136.
- 손동유. 2007. *과거사위원회 기록관리 현황과 과제*. 한국기록학회 제55회 월례연구발표회 발표문.
- 심성보. 2007. *교수 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향녕. 2007. *역사교육의 또 다른 지평 아카이브즈*. 『역사교육』, 101: 297-327.
- 이대헌. 2006. *폴란드의 나치청산: '8월 포고령'과 '중앙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29: 481-512.
- 이윤경. 2007. *아카이브즈의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희연. 2008.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247-292.
- 전수진. 2008. *보존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유형과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127-152.
- 정병준. 2005. *한국의 과거사 유산과 진상규명 작업의 역사적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5(2): 203-231.
- 지영인. 2006. *구술을 통해 본 일제하 제주도내 강제동원의 실태와 특징*. 『사회와 역사』, 72: 73-102.
- 차정민. 2008.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기억형성과 기록관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차주영. 2007. *역사적 사건의 콘텐츠화 과정연구*. 『인문콘텐츠』, 10: 283-303.
- 최관식. 2006. *업무기능 분석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문희. 2004.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

축사업: 문화유산 콘텐츠, '축적'과 '활용'의 전략적 코어에 대한 인식. 『인문콘텐츠』, 3: 367-377.

한혜인. 2005. 강제동원 정책과 동원 이데올로기. 『한국일본어문학회 제22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70-175.

황동열. 2003. 문화 원형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4(1): 45-62.

[관련 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이트]

- 국가기록원 나라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llection/viewJapaneseIntro.do>〉.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http://www.usshm.org/research/center/>〉.
- 오스트리아 저항운동의 문서화센터.
〈<http://www.doew.at/>〉.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http://www.gangje.go.kr/>〉.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http://www.jinsil.go.kr/>〉.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http://www.pcic.go.kr>〉.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http://www.jiwon.go.kr/>〉.
- 폴란드 기억연구소. 〈<http://www.ipn.gov.pl>〉.

[관련 보고서]

- 국가기록원. 『폐지(한시)기관 관리지침』. 2005.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2006~2009년도 상반기.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3주년활동 보고서』. 2008.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기록관리 소개』. 2007.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2006~2009년도.